

“내투기 의혹 관련 모든 수단·방법 동원”

민주 김윤덕 의원 “이번 일 통해 입법·제도 개선에 사력 다할 것”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입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드린 것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차례의 긴급대책 회의와 현안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윤리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

거래법)’ 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의원은 앞으로도 소속 상임위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균형발전 목표 위한 ‘첫걸음’

민주 김수홍 의원,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소도시특별법)을 23일 전격 발의했다.

“강소도시특별법”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 그리고 국토 발전의 극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대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곧 국가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소도시특별법’의 배경에 깔려 있다.

극심한 불균형은 곧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명분도 ‘강소도시특별법’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모이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강소도시특별법 발의로 당장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는 낙후도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라면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채용 확대,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화 등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토대가 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강소도시특별법에는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홍 의원은 강소도시특별법을 통해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강소도시 육성에 성공하면, 곧 국토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강소도시특별법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및 투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외되어 온 지방 중소도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자연스럽게 인구의 분산효과를 가져와 수도권 출렁 현상을 해소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홍 의원은 “선거 이전부터 국토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에도 대해 깊이 고민했고, 그 결과물로 강소도시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고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활기찬 경제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소도시특별법은 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에 한병도 의원, 이개호 의원 등 총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전주시의회 행정위

수소버스 충전소 현장 방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 의원)가 23일 서부권 복합 복지관 건립 및 전주시 수소버스 충전소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위원들은 서부신시가지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 중인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현장 점검한 뒤, 삼천동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를 방문해 주요 추진상황과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현장활동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안전심사에 임하겠다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용객 편리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 의원)가 23일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 및 동부대로 도로 포트홀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견훤로 일원을 방문해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을 꼼꼼히 살펴봤다.

위원들은 이어 동부대로로 이동해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돌출기 파손된 도로정비 현황을 파악했다.

/김윤상 기자

도민 건강증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최영규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건강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신체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이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했다.

도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4)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지원 등 전북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규 의원은 “전북도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습득해 도민 누구나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도의회 의장

재향군인회 감사패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더불어민주당·원주)은 23일 의정실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도 재향군인회 백상록 회장은 “송지용 의장이 평소 향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재향군인회 조직 활성화와 숙원사업인 향군회관 건물 신축에 도움을 줘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국가안보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해 왔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영광스럽다”며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 해역 이중조업구역 80% 해제 최종타결

민주 이원택 의원, 재조정 패거

전북지역 수산업의 최대 숙원사업인 전북해역 연·근해어업 ‘이중조업구역’ 재조정이 23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전북지역 어민들의 조업면적이 확대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이날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북해역 연안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 간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북 군산시 5.5km~11km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월~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 면적의 80%를 해제했다.

이로써 그간 ‘이중조업구역’을 들



러싸고 해마다 되풀이 됐던 연·근해 어업 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북지역 어민들은 4,200만 평의 이중조업 구역 중 3,300만평이 해제됨으로서, 현재 이중조업구역의 80%가 전북지역 어민들의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돼 전북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이중조업구역’ 재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근해통발 어업의 반발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전북지역 유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전북도 및 부안군 수산관련부서가 협업해 해양수

산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 전북지역 수산업의 최대의 숙원이었던 ‘이중조업구역’ 재조정 타결의 패거를 이뤘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이중조업구역 재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 관계자 및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그리고 전북도 수산부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중조업구역이 재조정돼 전북어민들의 조업 구역 확대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근해 통발어선은 명시된 지역에서 조업을 금지하며,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1년간 시범실시하고, 이후에 협약자가 폐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할 것으로 본다.

/유호상 기자



조경수 군산시의원,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 폭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폭행사건, 지방의회 공권력 침해”

조경수 군산시의원, “정치적 문제가 이번 폭행사건 유발”

조경수 전북 군산시의원과 그의 지인인 시민단체 전 대표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조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지난 11일 발생한 전 시민단체 대표인 A씨와의 폭행 사건에 대해 “이번 폭행 사건은 한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A씨와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폭행임에도 가해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시의 의결기관으로서 소임에 충실해야 할 시의원이 일부 지방권력과 물리적 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를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에 군산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당시 함께 있던 2명은 나가고 둘만 남아 대화 하던중 A씨가 조 의원을 때렸고, 조 의원은 안와,비밀경찰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이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A씨도 조 의원을 상대로 폭행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이날 폭행 장면은 CCTV에 찍히지 않았다.

조 의원은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일방적 폭행이 사소한 개인 간 다툼으로 왜곡되고 A씨가 쌍방폭행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와 정치적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갈등을 빚어 왔다”며 “이

런 대화 도중 A씨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A씨가 의사결정에 많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근대역 사당실공영인내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채용비리 의혹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에 대해 A씨가 ‘시장이냐’ 하는 일에 부담스런 일들이다, ‘시장 재선에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영준 군산시장과 전 시민단체 대표인 A씨의 관계가 밀접한 것을 고려하면,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이번 폭행사건을 유발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경수 의원 외에도 군산시의회 한안길·김경구·배형원·신영자 시의원도 함께 했다.

/유호상 기자

중자산업·농작물 신품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나인권 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술보급 추진 필요 비용 지원 등 담야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제379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중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세계 중자산업 시장은 약 700억 달러 규모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1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며, 해마다 거액의 로열티를 해외시장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중자 수출 2억 달러 달성을 통해 세계 13위권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2차 중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도 농생명 클러스터의 한 분야 사업으로 중자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통해 중자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 도내에서도 중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조례안에는 ▲중자산업 발전 및 신품종육성·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와 중자생산 기관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중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

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자생산 기술보급계획과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라북도 중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중자산업은 미래 산업 및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형 바이오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면적 감소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식량 생산 급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